eISSN 3140-409X

ISSUE BRIEF

이슈브리프 867호
(2026. 7.20)

“북중동맹의 현대화”: 최근 북중 고위급 교류를 통해 본 조중동맹의 진화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제867호

김성배 happynation@inss.re.kr
유현정 yhj@inss.re.kr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국문초록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전후하여 북중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연이어 이루어졌다. 한때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던 조중동맹이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변화된 국제정세에 맞추어 기능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최근 북중 양국 지도자의 발언과 공식 보도를 종합하면 북중동맹의 현대화[1]는 첫째, 군사적 상호원조를 넘어 경제·과학기술·인프라·사회문화·당 교류를 포괄하는 ‘포괄적 동맹화’, 둘째,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대만해협과 역내·글로벌 전략질서를 함께 고려하는 ‘지역동맹화’, 셋째, 북한의 핵능력과 대러 협력 확대에 따라 과거의 비대칭적 보호관계에서 보다 대등한 전략협력으로 전환하는 ‘수평적 동맹화’, 넷째, 사회주의 체제와 당의 영도, 반패권주의를 공동 기반으로 재확인하는 ‘가치동맹화’로 정리할 수 있다.

북중동맹의 현대화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성격을 갖는 동시에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등 복합적인 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북중 양국의 공동 적응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한중관계 복원,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분리 대응, 역내 다자안보대화, 장기적인 북미·북일관계 정상화를 병행함으로써 북중러 대 한미일의 진영 대립이 고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 ‘북중동맹 현대화’는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미중 전략경쟁,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외교·경제·안보·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심화하는 동맹의 기능적 재조정을 의미.

2026년 7월 11일은 1961년 체결된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조약 제2조는 체약 일방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상대방이 즉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중조약은 냉전기 북중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규정하는 핵심적인 정치적·법적 기반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북중관계의 이해관계가 점차 분화되고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조중조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무조건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조약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 체결 65주년을 전후한 약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북중 고위급 교류는 조중조약이 단순한 냉전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국제정세에 맞게 새로운 기능과 의미를 부여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진핑 주석은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6.8~9.)했으며, 7월 10일에는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박태성 내각 총리를 베이징에서 접견했다. 이어 왕후닝 전국정협 주석이 북한을 방문(7.15~17.)해 조용원 노동당 비서와 회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박태성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조중조약이 "투쟁과 피로 맺어진 양국 인민의 우의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정치적·법적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 관계를 "시대와 함께 전진"시키고 각자의 "사회주의 사업과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발언은, 북중동맹을 과거의 군사동맹에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기반으로 재해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북중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과 공식 보도를 종합 검토하여 북중동맹이 재설계되고 있는 모습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중 고위급 교류와 조중조약의 현대적 재해석

시진핑 주석은 2026년 첫 해외 방문지로 북한을 선택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이 북중 전통우의를 중시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사회주의 사업과 양국 공동이익을 확고히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정상은 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며 경제·무역,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 인문·문화 교류와 함께 당 대 당 경험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조중 친선협조 관계는 복잡 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 두 나라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굳건히 고수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동시에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왕후닝 전국정협 주석의 방북은 정상 간 합의를 당과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후속 조치의 성격을 갖는다.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왕후닝은 조용원 노동당 비서와의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중국 당과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양측은 정치·경제·문화협력과 고위급 전략소통을 확대하고 기업·민생·문화 및 당 대 당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방북 기간 중국 대표단은 중국인민지원군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시설과 노동당 간부양성기관, 금수산태양궁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을 방문했다. 이 같은 일정은 북중관계가 군사안보나 정상외교에만 의존하지 않고, 혁명 역사와 사회주의 이념, 당 간 교류, 관광과 민생경제를 결합한 다층적인 협력체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11일, 시진핑 주석은 조중조약체결 65주년을 기념하여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축전을 통해 지난달 평양 방문을 통해 "새 시기 중조관계 발전의 전략적 방향과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했다" 고 평가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조중관계가 "사회주의 위업을 공고히 하고 양국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 (필자 강조)고 강조하였으며, 중국 외교부도 "중조 관계를 유지·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전략적 방침" 이라고 밝혔다[2]. 이러한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양국은 북중동맹관계를 1961년 조중조약을 단순히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변화된 국제질서에 부합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지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북중동맹의 현대화 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 중국 외교부, 「習近平會見朝鮮內閣總理朴泰成」, 2026.7.10.

<북중동맹의 현대화 방향>

현대화 방향	내 용	관련 발언	지정학적 파급효과
포괄적 동맹화	군사적 상호원조 중심에서 경제·무역·인프라·과학기술·교육·문화·관광·당 교류를 포괄하는 복합동맹으로 확대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경제무역,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 인문문화 및 당 대 당 교류 확대를 강조. 왕후닝 방북시 민생·기업·문화협력 논의	군사위기 발생 시에만 작동하는 동맹이 아니라 평시 국가발전과 체제안정을 지원하는 상시적 협력체제로 전환
지역동맹화	한반도 유사시 상호원조를 넘어 동북아 및 글로벌 전략질서에 공동 대응	북한의 하나의 중국원칙 및 중국 핵심이익 지지, 반패권·다자주의와 지역·세계 평화 공동 강조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하나의 역내 안보구조 안에서 간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 증대
수평적 동맹화	북한의 일방적인 대중 안보의존에서 벗어나 북중간 상호적인 전략협력으로 변화	북한이 조중조약을 상호지원과 공동의 사회주의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담보로 규정하고, 북중 관계를 '가장 전략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	중국은 북한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대미 전략경쟁의 협력자산으로 인식하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병행 활용하여 협상력 확대
가치동맹화	사회주의 체제, 당의 영도, 공동의 혁명역사, 반패권주의 등 정치적 가치와 정체성에 기반한 결속강화	김정은의 '공동의 이상과 신념' 강조, 시진핑의 양국 사회주의 사업과 현대화 공동 추진 언급, 왕후닝 대표단의 당 간부학교 및 혁명사적지 방문	이해관계 변화에도 관계를 지속시키는 정체성 기반을 강화하고, 체제안전과 정권안정을 상호 핵심이익으로 인식

주: '수평적 동맹화'는 양국의 국력이 대등해졌다는 의미라기보다 북한의 핵능력 및 대러 협력 확대에 따라 동맹 내부의 정치적 거래관계가 과거보다 상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뜻함.

첫째, '포괄적 동맹화'에 기초하여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북중동맹이 군사적 상호원조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반면 최근 북중 간 협력 의제는 경제·무역,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 문화, 관광, 민생, 당 간 교류로 확대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양국 관계를 각자의 "사회주의 사업과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힌 것은 동맹의 목적을 국가생존뿐 아니라 국가발전까지 확대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북중동맹은 전쟁이나 군사적 위기에 대응하는 제한적 동맹에서 평시의 경제발전, 체제안정,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

하고 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의 실제 범위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광·인프라·교통·민생·지방 및 인적 교류 등 제재와 직접 충돌하지 않는 분야부터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지역동맹화'를 통해 동맹관계의 작동범위를 확대시킬 전망이다. 조중조약은 본래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과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북중 양국은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각자의 주권·안보·발전이익과 국제질서 전반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고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지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북중동맹의 전략적 시야가 한반도에서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만 유사시 북한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 위기가 미국의 군사자산 배분 및 동맹 운용 차원에서 상호 연계될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북한이 대만해협 위기 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거나, 중국이 한반도 위기를 대미 전략경쟁 차원에서 활용할 경우 미국의 역내 안보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셋째, '수평적 동맹화'를 통해 전략적 상호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중동맹은 중국이 북한의 안보와 경제를 지원하는 비대칭적 후견관계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북중관계의 힘의 분포도 변화하고 있다. 물론 경제력과 국제적 영향력 면에서 북중관계의 비대칭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북한이 전략적 자율성과 협상력을 확대함에 따라 북중동맹 내부의 정치적 거래관계가 과거보다 상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도 북한은 관리와 통제의 대상인 동시에 미국의 역내 군사력과 동맹 네트워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커졌다. 최근 양국은 일방적인 보호와 의존보다 “전략적 조율”, “상호지원”, “공동이익 수호”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북중동맹이 수평적 상호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방증해준다.

넷째, 북중동맹이 사회주의 체제수호와 반미·반서방 연대로서 ‘가치동맹’의 성격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동맹의 현대화는 실용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의 공유를 재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관계의 특수성이 “공동의 이상과 신념”에 있다고 강조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가 각자의 사회주의 사업과 현대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후닝 대표단이 노동당 간부양성기관과 혁명사적지를 방문하고 당 대 당 교류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양국은 북한 핵문제, 대미관계, 대러관계, 경제개혁 문제에서 여전히 상당한 입장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주의 체제 수호와 당의 영도, 서방의 압박과 체제 변화 시도에 대한 반대는 양국 관계를 결속시키는 공통의 정치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북중동맹의 가치동맹화는, 양국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제거하는데 목표를 두기보다는 그 차이가 관계의 전면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체제적 안전판의 성격을 갖는다.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북중동맹의 현대화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성격을 갖는 동시에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등 복합적인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북중 양국의 공동 적응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에는 한국군의 대북 방위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내 임무 수행능력을 강화하려는 구상이 자리 잡고 있다. 북중 양국은 이를 한미동맹의 기능이 북한 억지를 넘어 대중국 견제로 확대되는 과정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식 아래 북중은 동맹관계의 적용 범위를 경제·외교·이념·지역안보로 확대함으로써 미국이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비롯한 복수의 전선에 동시에 대응하도록 만드는 전략적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환경 속에서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 네트워크 강화에 대응해야 하는 동시에, 북러 밀착으로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북한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대외경제와 장기적인 체제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북중동맹 현대화는 이처럼 양국의 필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맹질서의 재편은 우리의 안보환경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북러동맹의 부활, 북중동맹의 현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질서는 양자동맹이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에서 여러 동맹과 전략적 협력관계가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형 경쟁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북중동맹의 현대화가 초래하는 리스크뿐 아니라 동북아 역내의 안보환경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전략적 소통을 가속화해야 한다. 북중관계 강화와 한중관계 악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한미중 간 협력의 영역이 아니라 북중 대 한미의 대결구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최근 전자입국신고서 문제 등에서 불거진 한중 간 불협화음을 가능한 한 조속히 해소하고 정상·고위급·안보당국 간 전략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만큼, 중국이 북중관계의 발전과 한중관계의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철저히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 북중동맹의 지역동맹화와 한미동맹의 역내 역할 확대가 맞물릴 경우 대만해협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군사적으로 연계될 위험이 있다. 한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라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되, 구체적인 군사적 개입 문제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의 헌법·법률, 국익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동맹 현대화가 북한 억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역내 역할과 전략적 유연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방위태세의 공백 가능성, 북한의 오판 가능성, 중국의 대응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내 동맹체제 간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다자안보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경쟁적 동맹체제가 강화될수록 군비경쟁과 오판의 가능성도 커진다. 한국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와 협조하여 위기관리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존 6자회담 참가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협의체를 모색하되, 처음부터 북한이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한반도 및 역내에서 핵전쟁 방지를 목표로 위기관리와 신뢰구축을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북한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미일과 중러 간의 전략적 소통을 우선 가동하고 이후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단계적 접근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 북미·북일관계 정상화를 통해 동맹 중심의 역내 질서를 다자협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 그 지역동맹을 체제안전의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는 한 북중·북러동맹을 강화하려는 구조적 동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북중동맹 현대화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만을 강화할 경우 단기적인 억제력은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호 동맹 강화라는 안보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필요성을 완화해야 한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